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세무전문위원)
taxatt@hanafn.com
문의 : 02-2002-1381

학력·자격증 고려대 MBA(회계학) / 세무사(제36회) / 노년학 전문가(2013)
경력 2002년부터 VP 손님 상담 / (전)서울디지털대학(SDU) 교양학부 강의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출간 / <알고싶은 부자들의 상담사례집> 출간
현재 활동 KBS 1TV 출연 및 조선일보 기고 중

2017년 하반기 조세정책 방향과 절세전략

신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중 조세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액 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려 하면서 하반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절세플랜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난 5월,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나라 살림살이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적자재정이 되지 않으려면 조세수입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는 5년간 178조원(연평균 35.6조원)씩을 추가로 조달할 것을 발표했다. 우선 재정지출 절감 등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연간 22.4조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세입개혁 안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6.3조원을,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통해 5.9조원 등 13.2조원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 신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세법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세 개정세법 방향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확장시절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었던 것처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의 약 75% 내외를 차지한다. 그래서 정부는 3대 세금의 정비를 통한 증세방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된다. 이번 정부 역시 세입 개혁 중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간접세) 중심으로 세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Check List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방안

» 소득세율은 지난 2016년에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17년 개정세법에서는 38%에서 40%까지 최고세율이 추가 상승되었다. 향후 개정세법 내용은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1안은 과세표준 3억원 최고세율 42% 방안이며, 2안은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상향하는 것이다.

2016년	2017년 현재	개정세법(1안)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시 소득세율 38% 적용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소득세율 40% 적용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소득세율 42% 적용(안)
과세표준 10억원이면 3억6,060만원 세금발생	과세표준 10억원이면 3억7,060만원 세금발생	과세표준 10억원이면 3억8,860만원 세금발생

Effect & Plan

이번 세율인상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셀러리맨의 급여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도소득세율 역시 소득세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해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고스란히 세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처리를 할 수 없는 셀러리맨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연공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 상품과 공제소비를 적극 활용해서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장기간 보유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부동산이라면 직접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대 간 이전을 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점검하고 거래해야 한다. 또 주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본 이후에 매각해야 한다.

Check List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방안

» 현행 세법은 개인기준으로 일반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과 해외금융소득을 포함해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연금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16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인당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는 약 11만 명으로 추산되며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신고대상자가 약 37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Effect & Plan

현재까지는 타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발생할 경우 약 7,300만원(공제없음으로 가정)까지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었다. 쉽게 말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7,3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가 되어도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약 6,300만원 가량까지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에 절세플랜을 담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시장이 회복되면서 ELS 금융상품의 수익이 높았다. 이를 감안해본다면, 내년에는 금융소득 신고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종합과세 기준금액까지 안하될 경우 더욱더 세금 추가납부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 투자방안으로 해외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 장기 비과세 보험 상품 등 절세플랜 상품은 필수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Check List 3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

» 현행 세법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비과세이지만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가 적용되며 비상장 주식은 주주 크기에 관계없이 주식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요건을 장기적으로 강화하여 주식 양도세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새로운 정부 역시, 주식 양도세율을 현행 20%(중소기업 10%) 세율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25% 세율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여부	2017년 4월 1일부터 지분율(금액)기준	2018년 4월 1일부터 지분율(금액)기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분율(금액)기준
코스피 법인	1%(25억원)	1%(15억원)	1%(10억원)
코스닥 법인	2%(20억원)	2%(15억원)	2%(10억원)
비상장 법인	4%(25억원)	4%(15억원)	4%(10억원)

Effect & Plan

법인의 지배주주는 경영권 방어 등을 감안한다면, 양도세 절세차원으로 주식비중을 낮추는 일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시기별로 강화되기 때문에 특정회사의 주식이 연도별로 대주주 요건에 넘어가는지를 잘 검토하고 투자하는 것이 세후 투자수익율을 끌어 올리는 전략이 될 것이다.

Check List 4

다주택자 임대수입 비과세 효과 중단 방안

» 현행 소득세법은 부부기준으로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한 경우 월세로 받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되며, 2주택부터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2018년 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새로운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수입 비과세 규정을 2018년부터 1년 앞당겨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개정세법 방향

Check List 1

법인세율 세부담 증가 방안

» 2015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수입 217.9조원 중 소득세 60.7조원, 법인세 45조원, 부가가치세 54.4조원으로 약 73.3%를 차지하며, 법인세는 20.6%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전체 세수입 242.6조원 중 소득세 68.5조원, 법인세 52.1조원, 부가가치세 61.8조원으로 약 75.1%를 차지하며, 법인세는 21.4%를 차지했다.

새로운 정부는 연도별 세수입 중 법인세가 소득세(약 28% 부담)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안) 등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높이는 최저한세를 인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Check List 2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

» 전체 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 이하로 세부담 확대보다는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명분이 앞선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증여 및 상속분부터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었다. 지난 2016년까지는 신고할 증여세(상속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주었는데 올해 분부터 7%로 인하하였다. 향후 개정세법안은 신고세액공제를 신고할 증여세(상속세)액의 3~5% 수준으로 더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016년 말까지 상속(증여)분	2017년 현재	개정(안)
산출세액의 10%공제	산출세액의 7%공제	산출세액의 3~5%공제

Effect & Plan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이는 부동산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면서 결국 사라졌다. 이를 감안해 본다면 정부는 장기적 측면에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줄이고 싶은 것이다. 납세자가 절세효과를 생각한다고 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듯 상속을 서두를 수는 없다. 다만, 상속을 대비한 증여플랜은 조금 더 서둘러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지는 않다. 하지만 전문가의 상담 속에 사전증여플랜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으로 재산평가상의 이익도 얻게 될 수 있다. ✎

2017년 하반기 주요 세금납부일정

- 7월 부가가치세 상반기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주택(1/2), 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1)
- 8월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9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기한, 주택(1/2),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2)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SUMMARY

- ① **소득세율 인상 방안** : 고소득자는 절세상품과 절세소비로 양도차익 큰 부동산은 양도 전에 증여를 점검하자.
-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방안** : 해외 비과세 펀드, 저축성 보험차익 등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모두 가입했는지 점검하자.
- ③ **주식 양도차익 과세강화 방안** : 경영권 방어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주식 투자용이라면 연도별 대주주 요건을 매년 연말에 점검하자.
- ④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안** : 상속을 대비하는 사전증여 플랜을 세우고, 자금 출처가 부족한 가족 구성원의 출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검토하자.